

코로나19에 전세버스업계 '생사기로'

- 차량 51%가 번호판 반납...매출액 2년 만에 81% 급감

기사입력 2021-02-15 11:33:13 수정 2021-02-15 11:33:53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신청을 한 전세버스들이 서있는 모습.

전세버스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업차량 증가와 운송수입 급감으로 생사기로에 처해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해말 기준 전국 전세버스 4만1608대 중 51%에 해당하는 2만1224대가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세버스 유사 이래 최대의 휴업 대수다. 2019년 전국 전세버스 휴업 차량은 643대에 불과했다. 무려 33배가 늘어난 것이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투쟁"이라며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3만300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 운행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운행기록증 발급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국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은 25만4789건으로 2019년 121만9743건에 비해 96만4954건, 79.1%가 줄어들었다.

운행기록증은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한 일종의 인증서로, 전세버스 대절시 발부받아 운행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행 감소는 당연히 수입감소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2018년도 운수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세버스 총매출액은 2조7701억원이었다. 하지만 전세버스 연합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5263억원으로 2년만에 무려 2조2438억원, 81%가 떨어졌다.

2018년에 업체당 19억9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엔 3억1800만원으로 무려 84%가 감소했다. 대당 운송수입도 651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급감했다.

전세버스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육상운송업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외국인관광객 입국과 각종 모임 등 단체활동이 거의 사라지면서 전세버스 수요도 급감했다. 수입은 거의 없어도 차량 할부금 등 고정비 지출은 계속돼, 대출을 받아 근근이 운영 중이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거의 없다. 정부의 1~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28곳(11.5%)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전세버스업 자체가 말살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행의 70%는 통학·통근 등으로 공공교통의 영역을 맡고 있지만 '관광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코로나19가 나아지더라도 단체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병문 기자 tbnews@hanmail.net